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2일 각 정당 후보들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김문수·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연합뉴스

“내란세력 심판” vs “독주 저지” vs “범보수 시드머니”

대선후보들 마지막 날 총력전

나라의 운명이 걸린 21대 대선을 하루 앞둔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김문수·개혁신당 이준석 등 주요 대선 후보들은 마지막까지 한 표라도 더 얻겠다는 각오로 서로 한 치의 양보 없는 총력전을 펼쳤다.

이재명 후보는 최대 격전지 수도권에서 모든 화력을 쏟아부었고, 김문수 후보는 제주에서 출발해 부산을 거쳐 서울로 오는 '경부 상행선' 코스를 잡았다. 이준석 후보는 '보수의 심장' 대구서 '씨앗론'을 앞세워 지지를 호소했다.

이번 대선에서 '내란 종식'을 기치로 내건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강북구 유세를 시작

이재명, 최대 격전지 수도권 집중공략
김문수, 제주-부산-서울 '상행선' 유세
이준석, 대구서 '씨앗론' 앞세워 호소

으로 경기 하남과 성남, 광명, 서울 강서구를 거쳐 여의도공원에서 선거운동을 마무리했다.

이 후보는 강북구 '북서울꿈의숲' 유세에서 "이번 선거는 이재명이 이기냐, 김문수가 이기냐를 결정하는 선거가 아니다"며 "그들이 복귀한다면 내란 세력에 의한 민주주의 파괴가 벌어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총알보다 강한 투표용지로 우리 자식들의 미래와 이 나라의 운명이 결정된다"며

"기회를 주시면 이재명의 민주당 정권이 확실하 다른 나라로 바뀌어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가 마지막 유세에 경기 하남, 성남, 광명 등을 포함시킨 것은 이들 지역이 수도권에 가장 많은 인구가 몰려 있고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거친 자신의 정치 이력을 상기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관측이다.

이 후보의 피날레 유세는 여의도공원에서 열렸다. 이는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국회 장악을 저지하고자 모여들었던 시민과 함께하겠다는 뜻을 담았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이 후보에 맞서 '독주 저지'를 외치고 있는 김문수 후보는 이날 제주에서 출발해 부산·대구·대전을 거쳐 서울에서 마무리하는 '경부 상행선' 경로를 택했다.

전통적으로 지지세가 강한 부산과 대구를 거쳐 대전과 서울에서 중도층 표심까지 아우르며 막판 표몰이에 매진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동선이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아 참배했다. 대선 후보로서 김 후보가 제주를 찾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김 후보가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4·3을 "명백한 남로당 폭동"이라고 한 발언과 관련, 4·3유족들은 '참배 거부' 피켓을 들고 김 후보에게 거센 항의를 하기도 했다.

김 후보의 마지막 유세는 서울시청 광장에서 진행됐다. 그는 마지막 유세에서 이재명 후보를 향해, 부패 프레임 등으로 몰아붙이면서 상대적으로 자신의 청렴함을 강조하는 동시에 경기지사 시절 광역급행철도(GTX) 건설, 기업 유치

등의 성과를 내세우는 데 주력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본 투표일을 하루 앞두고 후보간 지지도와 관련, "골든 크로스 구간에 진입했다"며 "역전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이날 경기 시흥과 경북 경산을 거쳐 대구에서 마지막 유세를 펼쳤다. 그는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 "세밀한 조사와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김문수 후보는 이미 분명히 졌다"며 "이준석에게 던지는 한 표는 범보수 세력이 젊음을 바탕으로 새로 시작해 보라는 투자의 시드머니"라고 이른바 '씨앗론'을 펼쳤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 후보는 해화역과 구의역과 강남역 등을 거쳐 보신각에서 마무리 유세를 열고 진보정당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언급하며 투표를 독려했다. /김진수기자

당선 의결 즉시 대통령 신분으로 공식 전환

선관위, 내일 오전 7-9시 의결할 듯
임기 개시와 동시에 軍통수권 이양

대선이 2일로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선에서 승리한 당선인이 언제 대통령 신분으로 공식 전환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통상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 이튿날 0시에 개시된다.

하지만 이번 대선처럼 대통령직 권위로 인해 치러진 대선인 경우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일 결정된 때 개시된다.

권위 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마감되는 즉시 자료 준비 절차를 거쳐 전체

위원회회의를 소집한다. 이 회의에서 선관위원장 이 개표 결과에 따른 대통령 당선인 결정안을 의결하면 그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것이다.

선관위는 대통령 당선인 의결을 위한 전체 위원회 소집 시점을 대선 다음날인 4일 오전 7-9시 사이로 예상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일단 오전 7시와 9시 사이에 회의를 할 예정이지만 개표가 탈 없이 빨리 진행된다면 오전 7시에도 할 수 있다"며 "위원들은 미리 출근해 대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원장의 개회 선언 및 모두발언으로 회의가 시작되면 당선인 결정문 낭독과 의결에 이르기까지는 5-10분 안팎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선증 수령 여부와 관계 없이 선관위 전체

위원회 회의에서 의결과 함께 의사봉이 두드러지는 순간 대선 당선인의 신분이 대통령으로 공식 전환되면서 임기가 시작되는 것이다.

국군 통수권을 비롯한 대통령의 모든 고유 권한은 임기 개시 시점에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신임 대통령에게 자동으로 완전히 이양된다.

이번처럼 대통령직 권위로 인해 치러졌던 2017년 대선에서도 이런 절차를 거쳤다.

선관위는 19대 대선(5월9일) 다음날인 5월10일 오전 8시께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대선에서 승리한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했다. 의결과 동시에 문 전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됐고, 국군 통수권 등의 권한도 바로 이양됐다. /연합뉴스

내일 국회서 21대 대통령 취임식 전망

취임 선서 위주 간소한 행사 예상
의장대 행진 등 생략 가능성 높아

제21대 대통령 선거 이후 새 정부 출범을 선포하는 대통령 취임 행사가 대선 다음날인 4일 국회에서 열릴 전망이다.

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례에 따라 국회에서 열리는 대통령 취임 행사를 준비 중으로 알려졌다.

행사는 취임 선서 위주로 간소하게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과거 대통령 취임식과 달리 보신각 타종 행사나 군악·의장대 행진, 예포 발사 등도 생략할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이번 조기 대선에서 선출되는 신임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임기를 시작하기 때문이다.

역시 권위 대선으로 당선 직후 취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 다음날인 2017년 5월10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주요 인사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 선서를 한 바 있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개시 선언과 국민의례, 취임 선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 순으로 행사를 진행했으며, 행사 명칭도 '취임식'이 아닌 '취임 선서식'으로 정했다.

이번 대선으로 선출된 신임 대통령 역시 이런 전례를 따라갈 가능성이 크다.

구체적인 행사 일정이나 장소는 대선 이후 확정된다.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당선인이 확정되는 대로 취임 행사 준비 사항을 보고,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창사 34주년 SINCE 1991

종합인쇄전문기업 (주)다원

최저가 인쇄소평률 1688-9959

내일의 꿈을 그려가십시오

(주)다원은
성실과 신의를 기업이념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풍요로운 미래를 위한 보다 큰 의욕,
그리고 새로운 궁지와 자부심으로
정성의 맘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다원인쇄솔루션 검색